

# 신규확진 2배...방역체계 전환 초읽기

## 17일 3,857명→23일 7,630명 주말 기준 '최다' 비수도권 비중 30%...광주·전남 대응단계 시행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8,000명에 근접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번지는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 고위험군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초점을 두고 방역·의료체계를 전환할 예정이다.

유행 규모가 견줄 수 없이 커져 하루 확진자가 수만명씩 쏟아져 나오게 되면 지금의 '3T(검사·추적·치료)' 중심의 전략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630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이후 두 번째로 많다. 최다 기록은 지난달 15일의 7,848명이다.

토요일(발표일로 일요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 수치다. 앞서 토요일 기준 최다

치는 지난달 12일의 6,683명이었다.

'감염 취약층'으로 꼽히는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백신 3차 접종이 진행되고 지난달 18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3천명대까지 떨어졌으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다시 뚜렷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17일부터 최근 1주간 상황을 보면 3,857명→4,070명→5,804명→6,601명→6,767명→7,008명→7,630명으로 하루 평균 5,962명이다. 6일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기 전인 지난달에는 신규확진자의 80%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으나, 최근에는 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60%대로 낮아지는 등 유행의 전국화 양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양성률은 이날 0시 기준 3.2%로, 지난 1주간 3%대로 집계됐다.

각각에서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해 전세계 확진자가 최근 20% 증가하면

서 해외에서 온 입국자 중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도 당분간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신규 확진자 수가 내달 초 중순 2만명대로 증가하고, 특별한 방역조치가 없다면 확진자가 앞으로 10만명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000명을 넘는 등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가 현실이 되자, 당국은 방역체계를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방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26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인다.

또 같은 날부터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오미크론 우세화 지역 4곳에서 새 방역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개 지역에서는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는 사람,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60대 이상 등 고위험군만 선별진료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할 수 있다.

이외 검사 희망자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집 근처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양성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전국에 총 654곳이 있다.

방역당국은 "각 기관의 위치와 운영시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은 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규모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당국은 이날 말 설 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아직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신규 확진자 수 증가와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병상을 꾸준히 확보한 결과 지난 22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병상은 중증병상 428개를 비롯해 총 2만1,824개로, 1주일전과 비교해 2,049개 늘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앞서 SNS를 통해 "직장이나 가족 중 다수가 격리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고위험군 보호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공약안박싱데이' 행사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안박싱 데이' 행사를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광주 붕괴사고, 정부가 주도"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지난 22일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정부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사고 수습 과정 전반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와 업체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실종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



파크 신축 현장에서 39층 짜리 건물 23~38층 일부가 붕괴하면서 1명이 다치고 창호·미장·소방설비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지난 14일 지하 1층에서 실종자 중 1명이 사망한 상태로 수습됐으며 남은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진행 중이다.

# 이재명 "311만호 주택공급...김포공항 주변 20만호"

## 부동산공약...서울 48만호 문재인 정부 차별화 부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3일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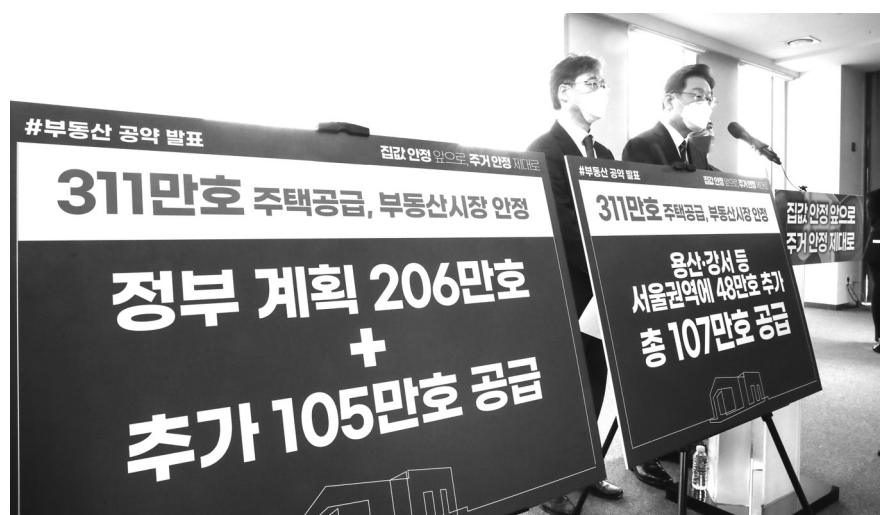
이 후보가 약속한 311만호의 공급 규모는 지난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호보다 61만호 늘어난 것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부동산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기존 공약보다 한층 규모를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적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화도 부각했다.

이 후보는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 민주당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 다시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변명하지 않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 요구를 존중하겠다"며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규모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후보는 정부의 기존 206만호 공급계획에 더해 이재명 정부에서 105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추가되는 공급 물량은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그 외 지역 29만호 등이다.

그 결과 서울의 총 공급 계획은 기존 59만호에서 107만호로, 경기·인천은 기존 123만호에서 151만호로, 그 외 지역은 기존 24만호에서 53만호로 증가한다.

서울에 신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48만호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28만호,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한 20만호 등이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방안으로는 김포공항을 준지하는 상태에서 주변 공공택지를 개발해 8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

변 반환부지를 활용해 10만호, 태릉·홍릉·장동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을 제시했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각각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의 총 공급량 중 공공택지 개발은 기존 계획 12만호에서 40만호로 늘어나고, 기존택지 재정비는 종전의 21만호에서 41만호로 늘어나게 된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신규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28만호는 공공택지 개발 20만호, 기존택지 재정비 8만호 등으로 구성됐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김포공항 주변 택지로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이다.

여기에 경기·인천 지역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로 8만호를 추가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인천의 전체 공공택지 개발은 기존 91만호에서 111만호로, 택지 재정비는 기존 20만호에서 28만호로 늘어난다. 김포공항을 준지하면서 주변 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은 서울과 경기를 합해 20만호 규모가 된다. /연합뉴스

## 여야, 신년 추경 살바싸움 치열

### 민주 '35조'·국힘 '45조' 정부안 대비 2~3배 규모

여야가 신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살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자마자 민주당이 '35조원'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간 '45조원'을 거론하는 등 애초 정부안 대비 2~3배 규모의 천문학적 숫자가 오가고 있다.

양당 모두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작 시급한 소상공인·지역일자 지원 논의는 뒷전이고 '돈 뿌리기' 공약 주도권 경쟁으로 표제선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재원 대책은 사실상 차기 정부 몫으로 미뤄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추경 증액을 위한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추경 규모는 35조원으로, 앞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32조~35조원이라는 추경 규모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효용을 끌어내 일 단 테이블에 앉히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

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3일 "윤석열 후보는 50조, 100조 숫자만 얘기하고 실제 추진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여야제안을 가리지 말고 일단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하면서 정부·여당이 새로운 추경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추경 규모도 정부안인 14조원에서 최소 45조 원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일찌감치 주장해온 50조원과 엇비슷한 수치다.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에서 32조~35조 원을 추가로 증액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원내대표실이 당 정책위, 예결위 간사와 추계한 결과, 약 45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당 후보 간 신경전도 가열되면서 책임 전가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후보의 회동 거부에 "앞으로는 (추경을)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못하게 막는 이중플레이·구태정치에서 벗어나길 원했고 앞으로 그러길 바란다"고 꼬아붙였다. /연합뉴스

오리지날 두유 - 베지밀

베지밀 전속모델 강석우 내연진 부부

##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 시니어 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 신제품 출시 ★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 하루서끼 건강메뉴

- 배 건강 위한 검은콩, 고칼슘, 비타민D
- 필수 단백질 효율 강화 메티오닌
- 두뇌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린
- 항산화 영양성분 이연거, 셀레늄(S)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당, 올리고당

1주 분량 | 전국 어디서나 1577-0426 스텝 트러스트 www.edaymail.com | 문의 및 고객상담실 080-830-8888, (02)553-8888 www.vegemil.co.kr

● 서울: 경자: 동부영양소 (02)552-4387 ● 부산: 영남영양소 (051)989-3382 ● 광주: 영광영양소 (02)225-9999 ● 대구: 영대영양소 (053)255-4208 ● 대전: 영대영양소 (042)254-8901 ● 충청: 영대영양소 (042)282-8801 ● 전북: 영대영양소 (063)244-5771 ● 전남: 영대영양소 (062)244-5001 ● 경북: 영대영양소 (053)559-3441 ● 강원: 영대영양소 (033)231-6528 ● 제주: 영대영양소 (054)479-8331 ● 부산: 영남영양소 (051)244-8501